

#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사회탐구 영역 ( 법과 사회 ) 해설

1. ① 2. ④ 3. ④ 4. ② 5. ③ 6. ③ 7. ② 8. ④ 9. ① 10. ②  
11. ③ 12. ③ 13. ② 14. ② 15. ④ 16. ③ 17. ⑤ 18. ⑤ 19. ④ 20. ③

### 1. 법이념의 이해

**정답 해설** 첫 번째 사례에서 13세 미만 및 장애가 있는 여자는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이다. 그런데 법에서 이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해 공소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이러한 범죄가 인륜에 반하기 때문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사례에서 일반인과 달리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대해 헌법 재판소가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본 것은 직계존속을 고소한다는 것이 인륜에 반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두 사례 모두 법이념 중에서 정의를 강조하고 있다.

ㄱ. 인륜은 시간이나 장소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보편적 정의로서 자연법론자에 의해 더 강조된다.

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는 배분적 정의를 나타낸다. 범죄의 성격에 따라 그 처리 방식도 달라야 한다는 것, 직계존속일 경우에는 고소할 수 없다는 것은 모두 배분적 정의와 관련된다.

**오답 피하기** ㄷ. 시효 제도는 일정 기간이 경과한 이후 법률 관계를 빠르게 확정지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ㄹ. “정의의 극치는 부정의의 극치다.”는 정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오히려 부정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으로 법적 안정성을 강조할 때 언급되는 법언이다.

### 2.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의 구분

**정답 해설** 갑은 형식적 법치주의, 을은 실질적 법치주의를 강조한다.

ㄴ. 갑은 일상 생활에서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더라도 의회에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야 한다고 본다. 즉, 법이라는 형식을 갖추었으면 그 내용은 상관하지 않겠다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ㄷ. 을은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법은 법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즉, 국가 기관이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국가 권력의 남용을 통제할 것을 강조한다.

**오답 피하기** ㄱ. 자연법 사상은 보편적 정의를 강조하므로 을의 실질적 법치주의 주장에 가깝다.

ㄷ. 통치의 합법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보는 것은 형식적 법치주의이므로 갑의 주장이다.

### 3. 이혼의 효과 이해

**정답 해설** ④ 이혼 시 재산 분할 청구권은 부부 공동 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이혼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든지 관계없이 부부 모두 갖는다. 따라서 을은 이혼의 원인을 제공했더라도 갑에게 재산 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친양자로 입양되면 양부모의 혼인 중 자로 간주되므로 A는 갑과 을의 가족 관계 등록부에 혼인 중 출생자로 기재된다.

② 친양자는 친생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므로 친생 부모의 사망 시 상속인이 될 수 없다.

③ 을의 부정 행위로 갑이 정신적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갑은 을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재판상 이혼은 이혼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 4. 노동 쟁의 조정 방법의 이해

**정답 해설** (가)는 조정, (나)는 중재, (다)는 긴급 조정이다.

② 확정된 중재 재정은 당사자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단체 협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오답피하기** ① 조정 결과 마련된 조정안에 당사자가 수락해야 조정서의 내용은 효력이 발생한다.

③ 지방 노동 위원회의 중재 재정에 불복하여 당사자가 10일 이내에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경우 재심 결정이 있을 때까지 중재 재정은 확정되지 않는다. 또 재심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중재 재정이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④ 긴급 조정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결정으로 개시된다.

⑤ 긴급 조정의 경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앙 노동 위원회가 중재 재정을 한다.

#### 5. 친족 관계의 이해

**정답 해설** ③ 병과 무는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으로서 인척이 아니므로 근친혼 금지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혼인이 가능하다.

**오답피하기** ① 을의 사망에 따른 상속인은 갑, 정, 무이다. 갑은 배우자이므로 법정 상속분이 9억 원이다. 정과 무는 모두 6억 원씩이다. 을이 A에게 전 재산 21억 원을 유증했지만, 갑은 자신의 법정 상속분의 1/2인 4억 5천만 원의 유류분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② 병은 을의 혈족이 아니므로 법정 상속인이 아니다. 따라서 유류분 청구권도 없다. 무는 법정 상속분 6억 원의 1/2인 3억 원을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다.

④ 태아라도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권은 인정되므로 정은 차량 운전자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권이 있다.

⑤ 갑과 무는 인척 관계로서 법률상 친족이므로 민법의 친족 부양 규정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무는 갑을 부양할 능력이 있고, 갑과 생계를 같이 하며, 갑이 스스로 생

계능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 갑을 부양할 의무를 진다.

#### 6. 국제법의 법원 이해

**정답 해설** (가)는 국제법의 법원 중에서 조약, (나)는 국제 관습법이다.

③ 국제 관습법은 국제 사회가 법으로 승인하고 준수하는 여러 국가의 관행으로서 국제 관행과 법적 확신의 두 요소에 의해 성립한다.

**오답피하기** ①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② 당사자의 신의 성실 원칙은 국제법의 법원 중에서 법의 일반 원칙에 해당한다.

④ ‘한·일 어업 협정’은 국가 간 상호 문서로 합의한 국제 조약이다.

⑤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라면 불문법 형태의 국제 관습법이 성문법 형태의 조약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 7. 법의 적용 과정 분석

**정답 해설** ② 법의 적용 과정에서 활용되는 법규에는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제정한 명령(시행령, 시행 규칙)도 포함된다.

**오답피하기** ① 사실의 확정은 사회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건들 중에서 법적 가치가 있는 사실만을 확정하는 법적 인식이다.

③ 국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지만 법원의 판결은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간주는 반대 증거의 제시만으로는 그 법적 효과가 번복되지 않는다. 간주의 효과를 무력화시키려면 새로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⑤ 성년 의제는 간주 조항이다. 간주는 법규에서 “~으로 본다.”라고 규정한다.

#### 8. 권리의 종류 구분

**정답 해설** 갑은 100만 원을 받을 권리(채권), 을은 노트북의 소유권(물권)을 가진다.

④ 소유권은 그 물건의 주인이 갖는 권리로서 다른 사람의 간섭 없이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을 갖는다.

**오답피하기** ① 갑의 권리의 객체는 을로부터 100만 원을 받는 행위이다.

② 갑이 돈을 받을 권리는 채권으로서 법인도 취득할 수 있다.

③ 노트북은 동산이므로 인도에 의해 물권 변동이 공시된다.

⑤ 갑과 을의 권리는 사인(私人) 간에 이루어지는 사권(私權)에 해당한다.

#### 9. 범죄의 성립 요건 이해

**정답 해설** : ㄱ. 현행범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므로 갑이 A를 영장 없이 체포한 것은 정당 행위로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ㄴ. 갑의 정당한 업무 집행(체포 행위)에 대해 A가 갑에게 상처를 입힌 것은 상해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있으며, 만 20세로서 심신 장애가 없으므로

책임성도 갖고 있다. 따라서 A의 행위는 범죄 성립의 요소를 모두 갖추었다.

**오답피하기** ㄷ. 을이 B를 폭행한 사실은 분명하므로 폭행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ㄹ. 을의 자구 행위에 대해 B가 반격하면서 을을 폭행한 것은 사회 전체의 법질서에 위반되므로 위법성이 인정된다.

#### 10. 실종선고의 효과 이해

**정답 해설** ㄱ. 실종 선고에 의해 갑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미성년자 을의 부모가 모두 없는 상태이므로 직계혈족인 병이 후견인이 된다.

ㄷ. 갑에 대한 실종 선고가 내려졌으므로 갑은 특별 실종 기간 1년이 만료된 2006년 4월 1일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오답피하기** ㄴ. 실종 선고에 의해 갑의 재산은 상속되는데 상속되는 재산에는 채무도 포함한다.

ㄹ. 선박 사고에 의한 실종이므로 특별 실종에 해당하여 실종 기간 1년이 지난 2006년 4월 1일까지 갑의 생사가 불명해야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 11. 근로 계약서 및 직장 내 성희롱의 사례 분석

**정답 해설** ③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부당 노동 행위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그 계약 내용을 이유로 갑을 해고한 행위도 무효이다.

**오답피하기** ① 혼인하면 퇴사한다는 서약서는 노동 관련 법규에 위반되므로 무효이다.

② 을의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갑에 대해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④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당사자는 사업주에게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직장 내 성희롱은 형벌의 부과 대상은 아니지만 고용 관계를 악화시키는 남녀 차별 행위이다.

#### 12. 민법상의 능력 구분

**정답 해설** (가)는 권리 능력, (나)는 행위 능력, (다)는 의사 능력이다.

ㄴ. 행위 무능력자는 미성년자, 한정 치산자, 금치산자이다. 미성년자는 연령에 의해, 한정 치산자와 금치산자는 법원의 선고에 의한다. 만 20세는 성인자이므로 행위 능력이 없는 지는 오직 법원의 선고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ㄷ.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의사 결정을 할 능력이 없으므로 의사 무능력자로 볼 수 있다.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오답피하기** ㄱ. 상속은 자연인만 가지는 법률 행위이다. 법인은 상속인이 될 권리 능력이 없다.

ㄹ. 만 18세의 고등학생은 미성년자로서 행위 무능력자이므로 부모의 동의 없이 행한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라도 살아 있는 자연인이므로 권

리 능력은 있다.

### 13. 판결문의 분석

**정답 해설** ② 심신 미약자의 행위는 형의 면제가 아니라 감경의 사유이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심신 미약자이므로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오답피하기** ① 대법원의 판결문에서 원심 판결은 2심 법원의 판결을 의미한다. 2심 법원이 고등법원이므로 1심 법원은 지방법원 합의부임을 알 수 있다.

③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이 이루어졌으므로 무죄 추정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④ 피고인은 심신 미약자로서 책임성 경감의 사유는 되지만 위법성은 인정된다.

⑤ 대법원에 상고하기 전의 원심 판결은 2심 법원의 판결을 말한다. 2심 판결은 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가 제기됨으로써 내려진 것이다.

### 14. 소년법의 처리 이해

**정답 해설** ㄱ. 갑은 형사 미성년자이므로 만 14세 미만임을 알 수 있다. 형사 미성년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

ㄴ. 을은 자기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으므로 책임 무능력자이다. 따라서 을의 부모는 피해자 B에 대해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질 수 있다.

**오답피하기** ㄴ. 을은 형사 미성년자는 아니고 청소년이므로 만 14세 이상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이전의 연령이다. 따라서 범죄 소년(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연령이다. 촉법 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연령이다.

ㄷ. 병은 만 19세이므로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소년법은 만 10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소년에게 적용된다. 따라서 병은 일반 형법의 적용을 받아 형사 재판을 통해 형벌을 받게 된다.

### 15. 공동 불법 행위 책임과 사용자 배상 책임의 이해

**정답 해설** 갑과 을의 불법 행위로 병이 피해를 입은 것이므로 갑과 을은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한편, 갑은 A의, 을은 B의 피용자이므로 A와 B가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④ 공동 불법 행위 책임에서 피해자는 가해자 중 특정인에게 손해액 전부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병은 갑이나 을 중 한 명에게 손해액 전부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A는 갑을 선임, 감독함에 있어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병에 대해 사용자 배상 책임이라는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A가 갑에 대해 사무 감독상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병은 갑에 대해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③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이 사례에서 병은 자

신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알고 있는 상태이므로 소멸 시효는 3년이다.

⑤ 공동 불법 행위 책임에서 과실 비율은 가해자 간 구상권 문제가 발생할 경우와 관련된다. 병은 누구에게라도 전액 배상을 물을 수 있으므로 B가 을의 사용자라고 해서 을의 과실 비율만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

#### 16. 법의 분류 이해

**정답 해설** 그림에 제시된 법은 형법, 민법, 상법이다. 형법은 공법이지만, 민법과 상법은 사법이다. 공법은 국가와 공공 단체를 법적 주체의 한 당사자로 보고 있다. 따라서 (가)에는 공법의 반대인 사법의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사법은 사인(私人)간의 대등한 법률 관계를 다루는 법이다.

(나)는 민법과 상법을 구분하는 질문이어야 한다. 상법은 민법에 비해 특별법적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나)에는 특별법의 성격을 묻는 질문이어야 한다.

**오답피하기** 나. 사법적 생활 영역에 공법적 규제를 가하는 것은 사회법이다. 근로기준법, 소비자 기본법 등이 해당된다.

르. 권리와 의무의 실현을 위한 절차를 규율하는 것은 절차법이다. 절차법에는 각종 소송법이 있다. 민법, 상법, 형법은 모두 법률 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등을 규율하므로 실체법이다.

#### 17. 자유권의 성격 이해

**정답 해설** 헌법 재판소는 정보 통신방법상의 본인 확인제가 인터넷 게시판을 익명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은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관련되므로 자유권에 해당한다.

ㄷ. 자유권은 국가 성립 이전의 기본권으로서 원칙적으로 내국인,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인간에게 인정된다.

르. 자유권은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공권이며, 인간으로서 갖는 자연법적 권리로서 천부인권적인 성격을 갖는다.

**오답피하기** 가. ‘국가에의 자유’를 실현하는 능동적 권리는 참정권이다.

나.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는 청구권이다.

#### 18. 위헌 법률 심판 제도의 이해

**정답 해설** ⑤ 헌법 재판소는 정보 통신방법상의 본인 확인제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즉, 기본권의 제한 정도를 기준으로 본인 확인제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① 헌법 재판소는 본인 확인제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며, 본인 확인제 이외의 수단으로도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위헌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② 위헌 법률 심사형 헌법 소원은 해당 법률 조항이 재판의 전제성을 가져야 한다.

즉 당사자가 그 법률 조항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야 하며,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다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 제시문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으므로 위헌 법률 심사형 헌법 소원이 아니라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임을 알 수 있다.

③ 법률 조항의 위헌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은 국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어야 한다. 기본권 침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로는 청구할 수 없다.

## 19. 행정상 손해 배상의 이해

**정답 해설** (가)와 (나)는 국가 배상법에 규정된 행정상 손해 배상의 요건이다. (가)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나)는 공공 영조물의 설치, 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이다.

④ 공공 영조물의 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 배상에서는 공무원의 과실 여부는 문제삼지 않는다. 즉 해당 공무원의 과실이 없어도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는 배상 책임을 진다.

**오답피하기** ① 군인은 국가에 소속된 공무원이며, 훈련지 순찰은 직무 집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복귀 중 사고를 낸 것은 (가)의 요건에 해당한다.

② 경찰관의 시위 현장의 질서 유지는 직무와 관련된 것이며, 이 과정에서 시위 참가자를 다치게 한 것은 고의 또는 과실로 볼 수 있다.

③ 교통 지도를 위탁받은 노인은 (가)의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私人)’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는 행정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⑤ 공공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란 그 영조물이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 기준에 미달된 것을 말한다.

## 20. 임차권과 근저당권의 이해

**정답 해설** ③ 임차권은 등기부의 을구에 기재할 수 있다. 그러나 임차권 등기는 어떤 임대차 계약이 있었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계약이 유효함을 정해 주는 기능을 할 뿐이다. 임차권 등기 그 자체로 어떤 물권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피하기** ① A은행이 갑의 주택에 대해 근저당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갑의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는 없다. 단지 채권액을 변제받기 위해 갑의 주택을 담보로 할 뿐이다.

② 근저당권의 설정 일자가 A은행이 B은행보다 먼저이므로 경매에서 A은행의 채권액이 먼저 변제된다.

④ 을은 입주와 전입 신고를 했으므로 대항력을 갖고 있다. 갑이 이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했을 경우 을은 새 주인에 대해 남은 기간의 거주를 주장할 수 있다.

⑤ 우선 변제권은 임차인이 경매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권리이다. 을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으므로 우선 변제권이 없다. 따라서 경매에서 을은 B은행보다 우선하여 임차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없다.